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 인천광역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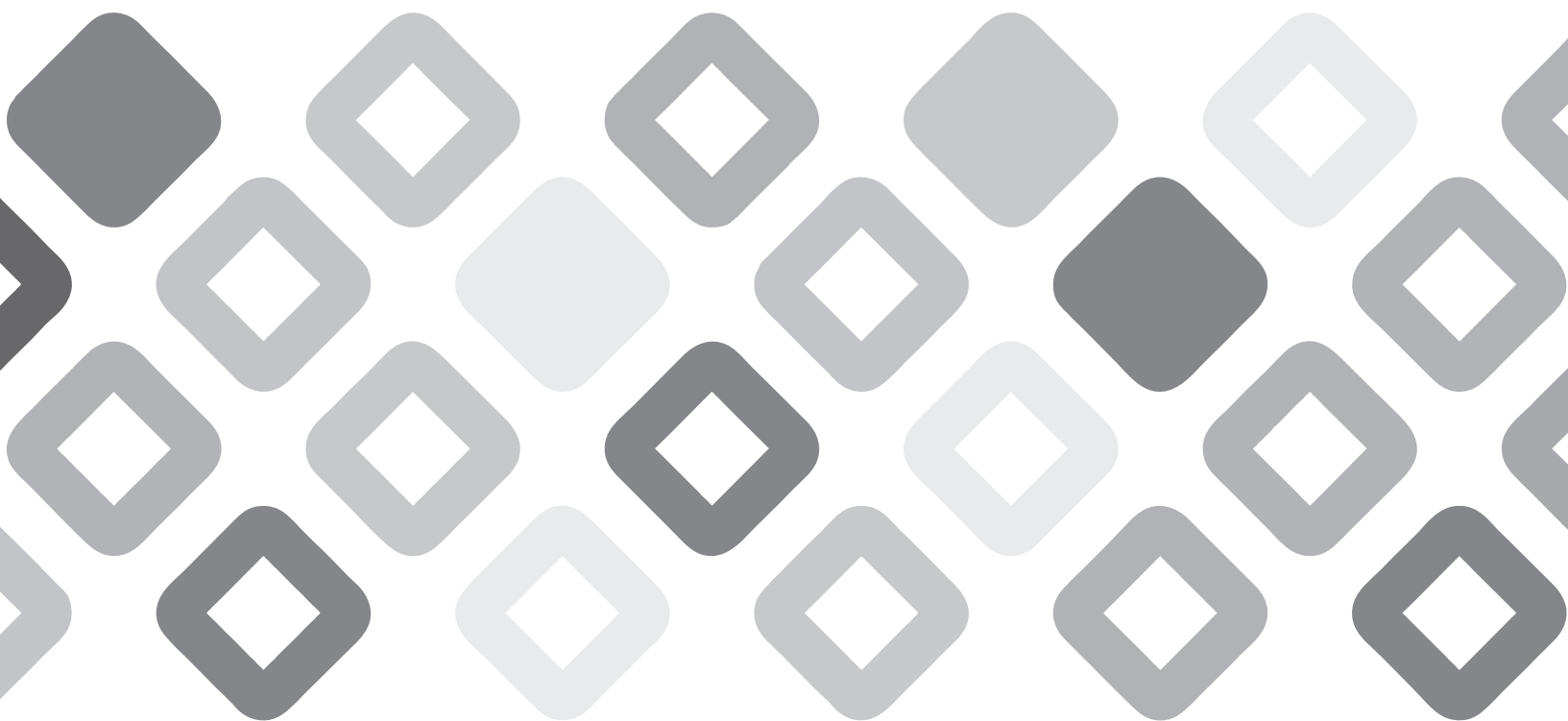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CONTENTS

1. 남창섭(인천일보 부국장)	1
2. 박병규(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9
3.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17
4. 이명원(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팀장)	23
5. 정인갑(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31
6. 차성수(인천YMCA 사무처장)	43



남 창 섭

인천일보 부국장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해야

남창섭 | 인천일보 부국장

내년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다.

법정기한이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여야 논의는 거의 없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할 의지도 생각도 없어 보인다.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지난 선거에서처럼 선거일을 앞두고 날림으로 개편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거제 개편안이 먼저 결정돼야 이후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별이는 선거구 획정 논의도 선거제 개편안이 확정돼야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선거제 개편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정치신인들의 선거 진입이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이 침해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전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다.

20대 국회는 21대 총선을 석 달 정도 앞둔 2019년 12월 말에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한 달 남긴 2016년 3월에 통과시켰다.

선거제 개편이 선거일에 임박해 줄속으로 합의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하고,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시작이 없어진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들에게는 시간을 끄는 것이 이익인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현역 의원실에서는 오는 10월 이후에야 여야 간 선거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처럼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 논의를 계속해서 늦춘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권한을 선관위 등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이유다.

의원 정수는 동결...비례대표는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 문제, 승자독식, 여론 왜곡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이전 광역 단위이전 정당득표율을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광역 단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선거제를 개편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실제 2004년에는 1인 2표제의 도입을 통해 비례대표제 후보자에 대한 독립적인 투표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 가능해졌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사이의 불비례성 문제와 특정 성별과 직업 출신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대표성의 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거대양당이 95%에 가까운 의석을 독점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소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도입된다면 지역성이 과다 대표되는 또 다른 모순을 나올 우려가 있다.

어떠한 비례대표 관련 제도를 도입하건 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비례대표제 비중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제대도 된 선거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비례대표 숫자를 과감하게 늘리기 위해 전체 국회의원 정원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이는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에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선거제 개편과 무관하게 인구비례 원칙 지켜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한인구수를 13만5521명, 상한인구수를 27만104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인구수는 20만3281명이다.

전국 소선거구의 의석 253석을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나눈다면 <표>와 같이 적정 의석수(a)가 나온다. 이를 현행 의석수(b)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다.

사실상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과다 대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3석)과 부산(+2석), 광주, 충남, 전북, 전남(각 +1석) 등 총 9석이 인구수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7)와 인천(-2)이 인구수보다 적은 의석수로 그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과다 해석해 인구수에 비해 과다하게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서울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3석이나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광역시를 비교해 봐도 부산시는 인구수에 비해 2석이나 많은 의석수를, 인천은 오히려 2석이 적은 의석수를 보이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도시의 인구수는 34만 명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5석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과 대구는 인구수가 60만 명 차이가 남에도 의석수 차이는 겨우 1석에 불과하다.

광주와 대전은 더 극명하다. 인구가 광주보다 더 많은 대전이 오히려 의석수는 광주보다 한 석이 적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의석수가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이 정치권이 기득권 싸움에 밀려 왜곡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표> 인구비례로 따른 시도별 걱정 의석수 및 현행 의석수 현황

[2023년 1월 31일 현재/통계청/자체분석]

시도명	인구수	걱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시도명	인구수	걱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계	51,430,018	253	253		경기	13,596,091 (26.43%)	66	59	-7
서울	9,424,873 (18.32%)	46	49	+3	강원	1,535,373 (2.98%)	8	8	-
부산	3,316,107 (6.44%)	16	18	+2	충북	1,594,459 (3.09%)	8	8	-
대구	2,362,880 (4.59%)	12	12	-	충남	2,122,913 (4.12%)	10	11	+1
인천	2,969,502 (5.77%)	15	13	-2	전북	1,768,229 (3.43%)	9	10	+1
광주	1,429,816 (2.77%)	7	8	+1	전남	1,816,707 (3.53%)	9	10	+1
대전	1,445,806 (2.80%)	7	7	-	경북	2,597,527 (5.04%)	13	13	-
울산	1,110,074 (2.15%)	6	6	-	경남	3,277,672 (6.37%)	16	16	-
세종	384,496 (0.74%)	2	2		제주	677,493 (1.31%)	3	3	-

인천지역 선거구 확정 논의는 최소화해야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인천에서 선거구 확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크게 2곳이다.

한 곳은 인구수 하한에 걸린 연수갑 지역이다.

현재 이곳의 인구수는 13만3276명으로 하한인구수를 13만5521명보다 2,245명 적다.

이는 연수구 전체 인구수가 28만5573명인 만큼 연수을 지역과의 인구수 배분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다만 연수 구도심인 연수갑지역과 연수구도심 및 송도신도시가 합쳐진 연수을 지역에 대한 인구수 배분 시 각 동별로 일관되게 배분이 이뤄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수읍 지역인 동춘동(1동, 2동) 전체를 연수갑으로 옮기던가, 현재 선거구가 나뉘어져 있는 옥련1동과 옥련2동의 경우는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야 할 것이다.

<현행 연수구 선거구>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다른 한 곳은 인원수가 60만 명을 돌파한 서구의 선거구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문제다.

현행 서구갑, 서구을에 새롭게 서구병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인구수에 비해 적은 선거구를 가진 인천의 불편한 현실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서구 선거구>

서구갑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최근 인천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얼마 전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가 마련한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하며,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통과시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시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제정에 나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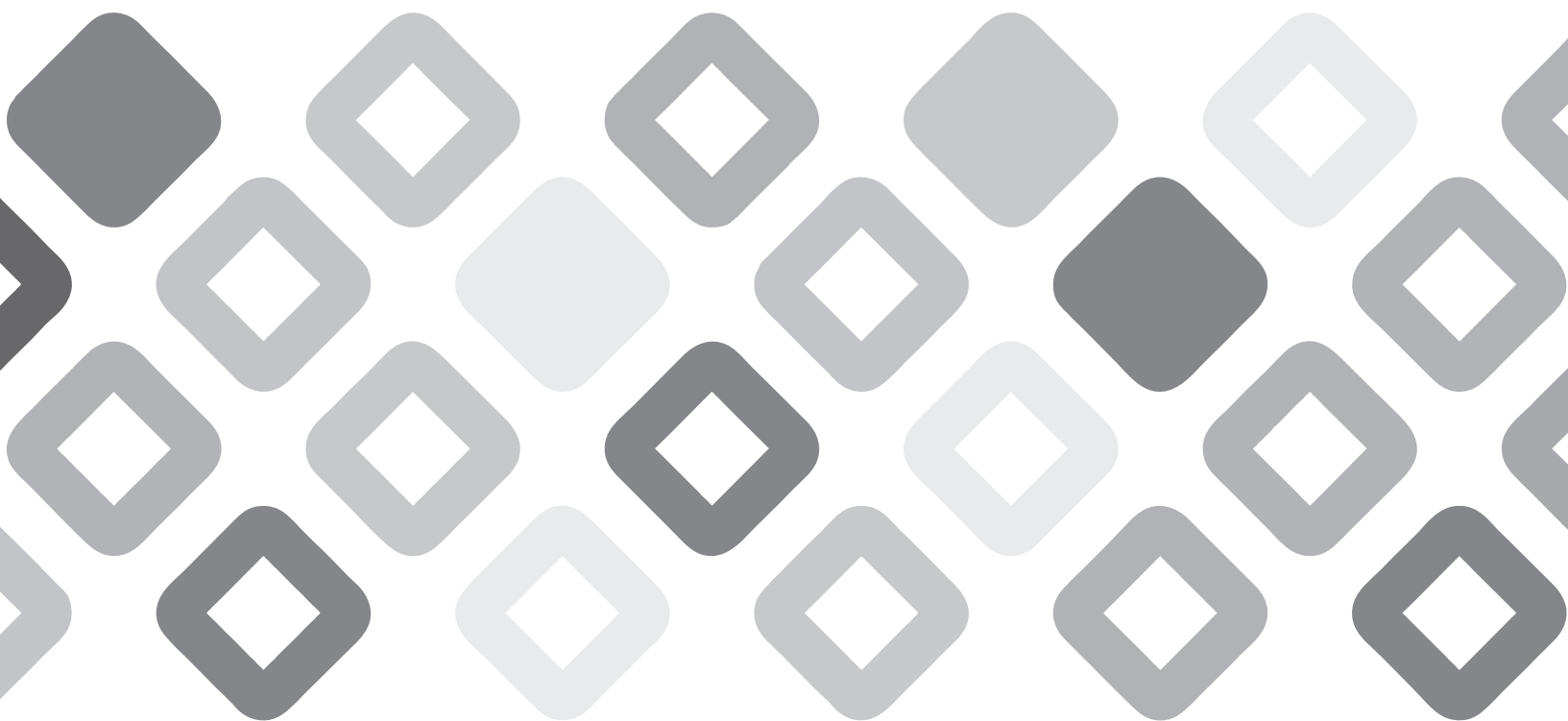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하지만 관련 행정절차는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1년 남은 내년 22대 총선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연수구와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혼란을 우려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23대 총선에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맞게 선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박 병 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의견

박병규 |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실장

1. 들어가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모든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상황임. 즉,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표가 버려지게 됨.
- 21대 총선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로, 20대 총선 사표 비율(50.32%)에 비해 6.59% 낮아졌으나, 실제 사표 수를 살펴보면 21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 비해 309,002표가 증가
- 인천지역에서는 총 1,581,145명의 투표가 진행되었지만 732,807표는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되었으며, 그 비율은 무려 46.35%로 전국 사표 비율보다 높은 상황임. 이중 인천 동구미추홀구울의 경우 사표 비율은 58.66%로 선거구별 사표 비율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 이는 고스란히 원내 제1당과 2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여 정치의 다양성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대결과 혐오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원내 제1당이 50%를 넘긴 정도였지만 실제 의석은 80%를 넘게 가져간 상황임. 즉, 정당 지지율과 비례하지 않는 의석 배분이 나타난 것임.
- 이러한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정당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 등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 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었으며 충분히 예상된 결과임. 20대 국회가 선거제도를 개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21대 총선 결과가 증명하듯 민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은 오히려 커짐.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안함.

2. 인천 현황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선거구	선거구역	인구수(명)
중구·강화군·옹진군	중구·강화군·옹진군일원	223,162
동구·미추홀구	갑 동구일원,미추홀구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255,704
	을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219,059
연수구	갑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145,614
	을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221,858

선거구		선거구역	인구수(명)
남동구	갑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246,164
	을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256,362
부평구	갑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244,135
	을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269,531
계양구	갑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138,502
	을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166,286
서구	갑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269,686
	을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273,731

2) 2023년 1월 기준 선거구별 인구 현황(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선거구		선거구역	인구수(명)
중구·강화군·옹진군		중구·강화군·옹진군 일원	243,769
동구·미추홀구	갑	동구 일원,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251,480
	을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213,056

선거구		선거구역	인구수(명)
연수구	갑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133,276
	을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252,297
남동구	갑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247,055
	을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258,158
부평구	갑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259,095
	을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230,808
계양구	갑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135,710
	을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152,500
서구	갑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269,063
	을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323,235

- 2023년 1월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는 203,281명이고, 이에 따른 하한 인구수는 135,521명, 상한 인구수는 270,042명 임.
-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인천의 경우 연수구갑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상황이고, 서구을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상황임.

3. 제 안

- 연수구는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는 것이 필요

선거구		선거구역	인구수(명)
현행	연수구	갑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133,276
		을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252,297
개정	연수구	갑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195,044
		을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190,529

- 서구의 경우 현재 갑과 을 2개의 선거구이지만 인구 편차에 따라 3개의 선거구로 의원 정수를 1명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검단지역에 1개의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선거구		선거구역	인구수(명)
현행	서구	갑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269,063
		을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323,235
개정	서구	갑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198,157
		을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190,130
		병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204,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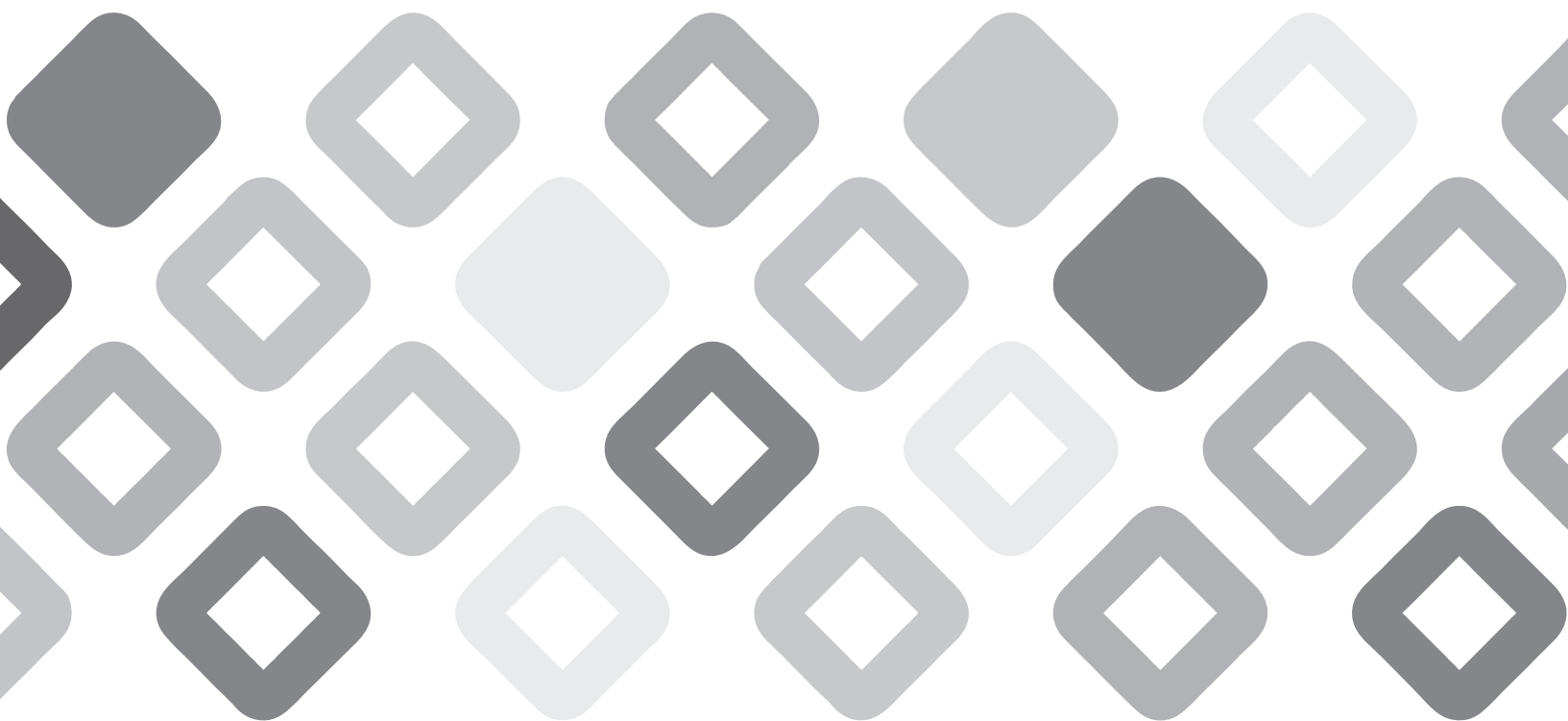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4. 결 론

- 현행 공직선거법 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천의 경우 인구 편차에 따라 의원정수가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어야 함.



이 광 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 따른 의견

이광호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1. 인천지역 의원 수 증원 필요

- 인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했을 때 약 303만 명이고 부산 인구는 약 335만 명
- 두 지자체 간 인구 차이는 약 30만 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수는 부산은 18명, 인천은 13명으로 5명의 차이가 남.
-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함.

2. 인구 상한과 하한에 따른 선거구 조정 필요

- 한 선거구당 인구수 기준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 [평균인구수 (전국인구수 ÷ 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⅓%]
- 인구상한선을 넘은 선거구는 분구, 인구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합구
- 2023년 1월 기준,
서구율은 323,235명으로 상한을 넘어 서구는 갑을병으로 조정 필요
연수갑은 133,276명으로 하한에 미달 연수구 내에서 갑을 관련 선거구역 조정 필요

1) 서구 인구 상한에 따른 선거구 조정

○ 현행 선거구

갑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인구수 : 269,063
을	-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인구수 : 323,235

○ 변경 선거구

갑	-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 인구수 : 198,157
을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인구수 : 190,130
병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 인구수 : 204,011

○ 근 거

- 지역 역사성과 생활권역의 동질성
- 주민들의 행정, 교육, 지역경제 등의 권역 형성

※ 서구병 예정지역(검단 지역)과 강화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할 경우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란 발생

2) 연수구 인구 하한에 따른 선거구 조정

○ 현행 선거구

갑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 인구수 : 133,276
을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 인구수 : 252,297

○ 변경 선거구

갑	-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인구수 : 195,044
을	-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 인구수 : 190,529

○ 근 거

- 연수구 원도심 지역과 송도 신도시 간 생활권 등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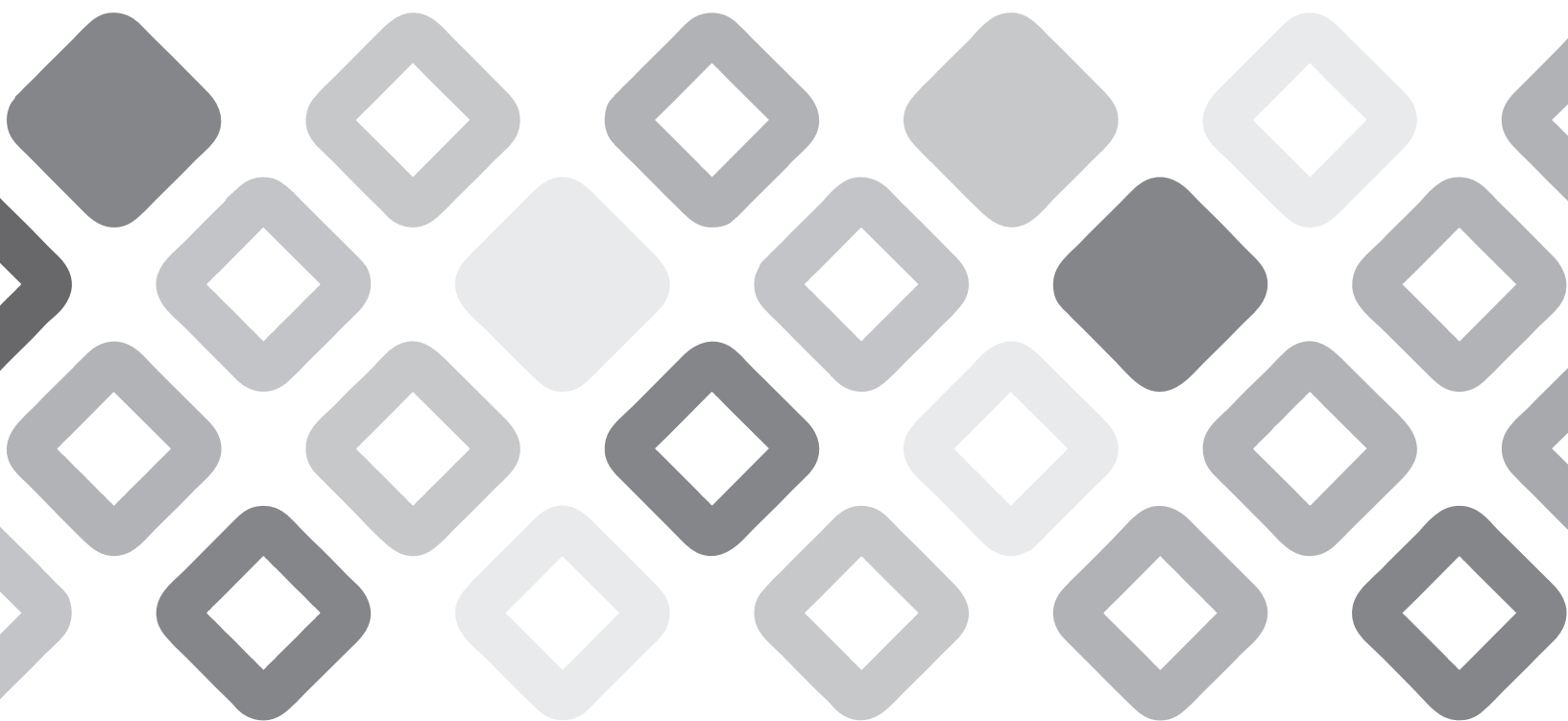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3.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에 앞서

- 지역 내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제기로 선거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지역 내 선거구 획정은 무의미
- 이에 선거구 획정 의견 수렴 전에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선거법 개정 등) 필요
 - 비례 대표제 정상적 회복 필요
 - ▶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 ▶ 사표율이 적고, 비례성이 확실히 개선되는 방안 모색
 - 국회의원 1인 세비 동결과 의원정수 확대



이 명 원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팀장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의견서

이명원 |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팀장

1. 인천광역시 현황

- 인천시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원도심 개발 등 행정 여건의 급변에 따른 시민의 행정수요와 민원 증폭에 따라 1995년 확립된 2군·8구 행정체제를 2026년까지 2군·9구 체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였음.
 - 이번 개편안은 내륙과 섬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구를 나누어 인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합쳐 (가칭)제물포구로, 섬 지역을 (가칭)영종구로 개편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서구를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구하는 것임.
 - 이 개편안은 현재 자치구·군의 인구·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개편안으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긍정 평가
- 현재 인천시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이중 서구는 청라와 검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등 인구가 폭증하여 60만 명을 넘겼으며, 특히 서구를 선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구수 상한선을 약 5만 명 초과하여 반드시 분구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계획과 현행 선거구의 인구·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현행 13개 선거구 내에서 서구를 3개 분할선거구로 분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반드시 14개 선거구로 증구하는 등 선행조치가 절실함.

2.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1)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현황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하한인구수 : 135,521명

<지역선거구 인구기준일, 23년 1월말 기준>

선거구	인구수	비 고
중구강화군옹진군	243,769명	
중구	153,421명	
강화군	69,763명	
옹진군	20,585명	
동구미추홀구갑	251,480명	
동구	59,238명	
미추홀구	192,242명	
동구미추홀구을	213,056명	
연수구갑	133,276명	2,245 미달
연수구을	252,297명	
남동구갑	247,544명	
남동구을	258,158명	
부평구갑	259,095명	
부평구을	230,808명	
계양구갑	135,710명	
계양구을	152,500명	
서구갑	269,063명	
서구을	323,235명	52,193 초과

2) 선거구 획정 제안

① 연수구 (연수구갑 -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

- 연수구는 크게 인천 내륙에 위치한 원도심과 그 남서쪽에 매립으로 조성한 신도시를 합쳐 하나의 자치구로 되어 있으나, 하천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 등이 상이함.
 - 통상 신도시는 송도1~5동을, 원도심은 그 외 동을 지칭함.
 -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는 인구 비율을 맞추기 위해 원도심의 일부 동(옥련1, 동춘1·2동)을 연수구을 선거구로 포함
 - 신도시 인구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는 연수구을의 인구가 연수구갑의 2배에 육박(연수구갑 : 연수구을 = 133,276 : 252,297)
- 이에,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 등을 감안하여 원도심과 신도시로 경계를 조정하여, 각 선거구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연수구갑의 경우 GTX-B 개통 등 원도심 균형발전의 주요 대상지로 도시 확장이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련1동 등 연수구을에 속한 원도심 일부 동을 우선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 필요

② 서구 (서구을 -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 서구는 원도심과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성된 청라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에 최근에 조성된 검단지역 등 대규모 신도시가 합쳐 하나의 자치구로 되어 있음.
 - 청라지역에 인구 유입이 본격화된 때부터 서구갑에 속했으며, 이후에도 인구 유입이 가속됨에 따라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구갑에 속한 원도심 일부를 서구을로 보내 조정했고,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청라지역을 나눠 조정했음(현행 청라1·2동은 서구갑에, 청라3동은 서구을에 속함).

- 검단지역은 역대로 서구읍에 속했으며, 청라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경계 조정을 통해 서구읍 선거구의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상한 초과 발생(검단지역은 서구읍 지역 중 청라·검암경서·연희동을 제외한 지역을 통칭함.)
- 이에, 인구·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서구갑과 서구읍의 경계 조정을 통해 서구병 선거구 신설

현행				조정안			
선거구	인구	총 인구	비고	선거구	인구수	총 인구	비고
서구갑	가정1·2·3동	53,238	269,063	서구갑	가정1·2·3동	53,238	190,130
	신현원창동	30,569			신현원창동	30,569	
	석남1·2·3동	47,638			석남1·2·3동	47,638	
	가좌1·2·3·4동	58,685			가좌1·2·3·4동	58,685	
	청라1·2동	78,933			청라1·2동	78,933	
서구읍	청라3동	34,506	323,235	서구읍	청라3동	34,506	198,157
	검암경서동	45,300			검암경서동	45,300	
	연희동	39,418			연희동	39,418	
	검단동	33,388			서구병	검단동	
	불로대곡동	23,486		불로대곡동		23,486	
	원당동	23,351		원당동		23,351	
	당하동	26,970		당하동		26,970	
	오류왕길동	25,029		오류왕길동		25,029	
	마전동	22,167		마전동	22,167		
아라동	49,620	아라동	49,620				
합계 인구		592,298		합계 인구		592,298	

※ 추가의견

- 관련하여 인접 자치군·구와의 합구가 거론되고 있으나 ①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 등에서 동질성을 찾기 어렵고, ② 인접 자치군·구에 속한 주민과 당원의 반대 의견이 많음.
- 이에, 현행 13개 선거구를 14개로 증설하지 않은 채 타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주민과 당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3. 결 론

- 이번 선거구 획정의 쟁점 사항은 서구의 분구와 그에 따른 연쇄적인 조정에 있을 것임.
 - 서구을의 경우,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하여 선거구를 1개 늘려야 하나,
 - 인접 자치군·구와의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에 있어 이질성이 크고 반대 여론도 비등하고 있음. 또한 인위적인 합·분구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누려야 할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악화할 가능성이 큼.

- 이에, 현행 인구 상·하한 규정에 따른 서구의 분구는 불가피하나,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주민이 납득할 만한 조정이 되어야 함.
 - 특히, 13개 선거구 체제를 14개로 늘리는 것이 매우 절실하며, 필요시 인구 상·하한 규정 및 합·분구 규정을 개정해 조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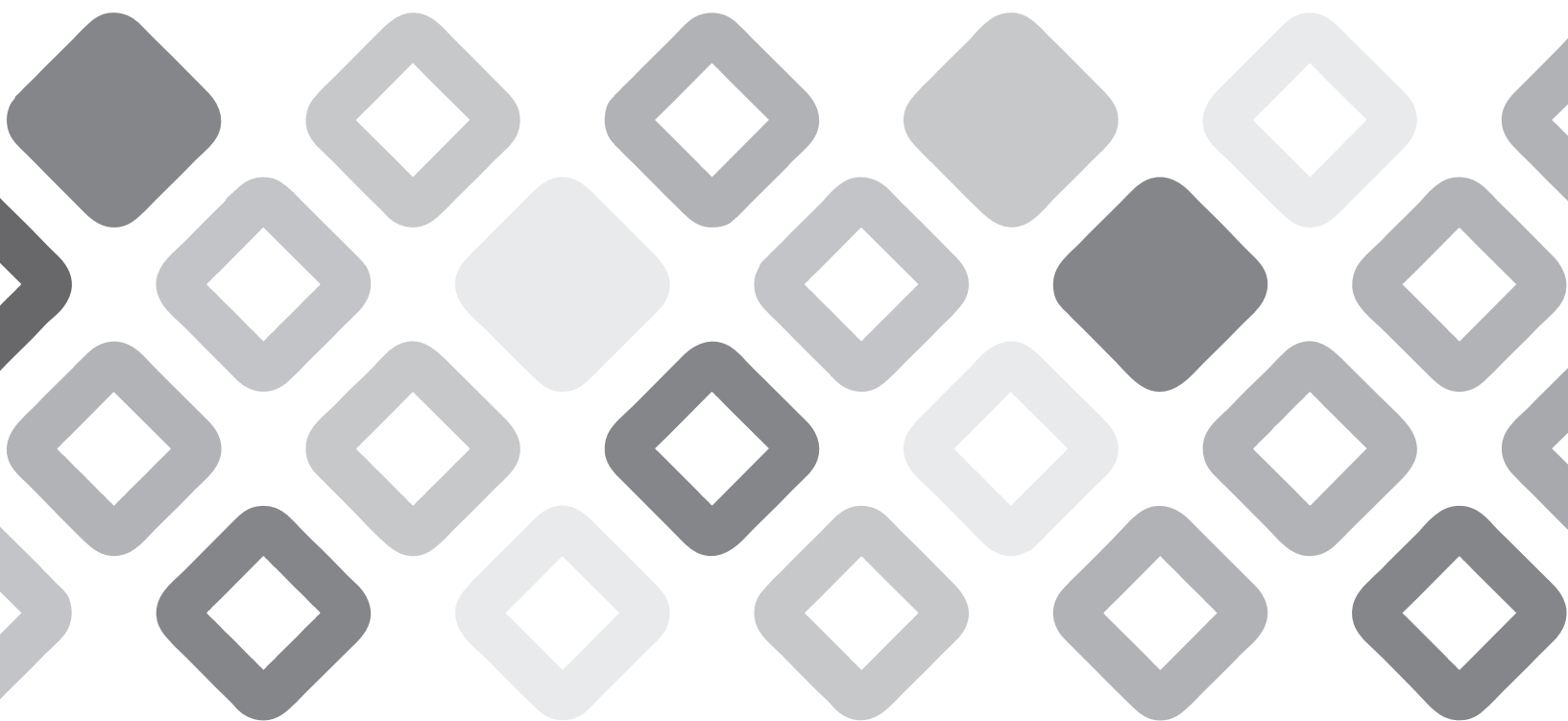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 기타 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납득할 합리적인 경계 조정으로 확정 필요

- 추가의견
 - 계양구의 경우 인구하한에 거의 인접해 있고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에서 서구나 부평구와 동질성이 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접 자치군·구와 합구가 바람직함.
 -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바, 그 추이를 살피 유연한 대처와 추가논의를 바람.



정 인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2024년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안 제시

정인갑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1 선거구 획정 개선 목표

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및 지역 대표성의 확보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과 신도시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심화
- 10개 군·구 중 소멸위험지역(2022년 3월 기준)은 강화군과 옹진군 2개¹⁾
- 사회·경제적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원도심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필요

나. 부산, 대구 형평성을 고려한 의석수 확대

-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인천은 13석인데 반해 부산은 18석에 달함.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인천은 약 22만8000명이고, 부산은 약 18만5000명임.
- 인천 국회의원 1명이 부산 국회의원 1명보다 인구 약 4만 명을 과대표 함.
-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 기준을 부산으로 맞춘다면 인천 국회의원 의석수는 16석이 되는 것이 형평에 맞음.
- 인천 남동구의 인구는 약 50만1400명으로 서울 노원구 인구 약 50만1800명과 약 400명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 특히, 인천 서구는 2023년 1월 기준 인구가 약 59만2000명이다. 의석수 3석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보다도 인구가 많음. 하지만 인천 서구는 의석수가 2석에 불과

1)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2022. 4. 29.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

시·도	정수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수		
		인구범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상한 초과	하한 미달	
부산광역시(3,316,107)	18	1	3	1
인천광역시(2,969,502)	13	1	1	-
대구광역시(2,362,880)	12	-	-	-

< 「공직선거법」 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

- 인구기준일(제25조제1항제1호): 2023. 1. 31.
- 지역선거구수(제21조제1항): 253개
 - ※ 시·도별 지역선거구수: 「공직선거법」 별표1 참조
-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135,521명
 - 상한인구수: 271,042명
 - ※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⅓%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제25조제1항제2호)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인천 총선 선거구 획정 제안

가. 선거구 조정 및 확대 불가피

- 지난 1월 31일 기준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3281명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21대 총선 선거구 구역표〉

지역구(13)	인구 수	해당 지역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243,769	중구 일원(153,421) 강화군 일원(69,763) 옹진군 일원(20,585)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	251,480	미추홀구(192,242) :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59,238)
동구미추홀구를 선거구	213,056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 선거구	133,276(미달) 연수율과 조정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를 선거구	252,297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송도5동 분동)
남동구갑 선거구	247,055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를 선거구	258,158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부평구갑 선거구	259,095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를 선거구	217,57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 선거구	135,710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를 선거구	152,500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 선거구	269,063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를 선거구	323,235(초과) 분구 및 서구갑과 조정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나. 연수구 선거구의 조정

- 연수구 인구 38만 5574명 중 갑 지역(옥련2동, 선학동, 연수1·2·3동, 청학동, 동춘3동)은 인구범위 하한선에 못 미치는 13만 3,276명으로 인구 하한선 기준보다 2,255명 부족
- 을 지역은(동춘1·2동, 옥련1동, 송도 1·2·3·4·5동) 25만 2,297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갑 지역의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조정 요구 불가피함.

[A안 : 지리적 요인 및 정책의 연속성 고려]

- 옥련1동은 제21대 총선에서 연수갑 선거구에 포함된 옥련2동과 함께 본디 옥련동이었던가 분할된 것으로, 연수갑의 하한 인구수 미달 상황 해소를 고려한다면 연수갑에 옥련1동을 포함하여 조정
- 동춘동에 소재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현재 인천경제청의 주도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추진되는 곳으로 송도 국제 도시와 연관성 있는 경제자유구역 정책 수립이 예상됨.

<인천 연수구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제안(A안)>

연수구갑 선거구	152,131	<u>옥련1동</u>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 선거구	233,442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동춘1동, 동춘2동

○ 연수갑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조정하되, 21대 총선 이후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수구갑 선거구(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에 연수구을 선거구 중 일부 지역(옥련1동)만 포함. 아암대로와 워터프론트 아암호수 동측으로 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원인재역~문학경기장역)역세권 중심 생활문화권 조성 및 미추홀구 인접 지역

- 지 리 : 아암대로 동측, 워터프론트 아암호수 동측, 미추홀구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원인재역~문학경기장역) 역세권 중심, 연수구청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제2경인고속 학익JC·문학IC, GTX-B노선(연장 예정), 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원인재역~문학경기장역), 인천발KTX(수인선 송도역)

○ 연수읍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조정하되, 정책의 연속성과 교통 및 생활문화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21대 총선 연수구읍 선거구 중 송도국제도시(송도 1·2·3·4·5동)와 아암대로 동측 일부 지역(동춘1·2동)을 유지함. 승기하수처리장(동춘2동) 지하화 사업과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부지 연결 등 고려

- 지 리 : 아암대로(워터프론트 아암호수) 서측 및 컨벤시아대로 인접지역, 청량산 남측
- 생활문화권 : 송도국제도시 및 동춘역(스퀘어원)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제2경인고속(인천대교) 연수JC, 제2경인고속(송도·연수) 송도IC GTX-B노선(연장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달빛축제공원역~동춘역)

[B안 : 선거구 간 인구 최소편차]

<인천 연수구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제안(B안)>

연수구갑 선거구	195,044	<u>옥련1동</u>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u>동춘1동</u> , <u>동춘2동</u> , 동춘3동
연수구을 선거구	190,529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 연수갑

선거구별 인구 편차 최소화,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을 때, 아암대로와 워터프론트 아암호수 동측으로 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동막역~문학경기장역) 역세권 중심 생활문화권 조성 및 미추홀구 인접 지역으로 조정

- 지 리 : 아암대로 동측, 워터프론트 아암호수 동측, 미추홀구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동막역~문학경기장역) 역세권 중심, 연수구청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제2경인고속 학익JC·문학IC, GTX-B노선(연장 예정), 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동막역~문학경기장역), 인천발KTX(수인선 송도역)

○ 연수읍

아암대로와 워터프론트 아암호수 서측으로 송도국제도시 조성 지역 및 중구 신흥동 인접 지역으로 조정

- 지 리 : 아암대로 서측, 워터프론트 아암호수 서측, 중구(신흥동)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송도국제도시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제2경인고속(인천대교) 연수JC, GTX-B노선(연장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달빛축제공원역~캠퍼스타운역)

다. 서구 선거구의 조정

- 인천 서구는 2023년 4월 기준 인구 60만명을 돌파해 국내 특·광역시에 속한 기초 자치구 중 서울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
- 경인아라뱃길이 지리적으로 북측과 남측을 나누고 있으며, 북측에는 검단신도시, 남측으로는 검암경서동, 청라국제도시(청라1·2·3동), 루원시티(가정1·2동)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이
- 검암경서동, 연희동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서구을 선거구에 포함되었으나,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서구갑지역(서구·강화갑)에 속해 있었음.

[A안 : 교통 및 생활문화권 및 정책 연속성 고려]

<인천 서구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제안(A안)>

서구갑 선거구	153,365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 선거구	234,922	가정1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병 선거구	204,011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 서구갑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가좌C~서인천C 구간 일반화 및 지하도로 개통이 추진, 서인천C(서울방향)로 진입하는 구간을 포함하여 서구갑 지역(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을 조정

- 지 리 : 부평구·미추홀구·동구·계양구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석남역세권·거북시장·강남시장·가좌시장 등 전통시장 중심으로 확대,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 권역
- 교 통 : 경인고속도로(서인천C~가좌C), 봉수대로(가정사거리 남측), 봉오대로, 인천지하철 2호선(가재울역~가정중앙시장역), 서울지하철 7호선(석남역~독골사거리역)

○ 서구을

경인아라뱃길 남측으로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가정 공공택지지구, 가정2지구, 경서3 도시개발구역 등 신규택지가 조성되는 권역으로 서구을 지역(가정1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조정.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중 봉수대로역(가칭)은 청라1동과 가정1동 주민들이 이용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 남청라C(청라국제도시)~서인천C(가정동)~신월C 지하화 추진 중

- 지 리 : 아라뱃길 남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남측, 심곡천 북측, 공촌천 주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변
- 생활문화권 : 청라국제도시·가정공공택지지구·검암역세권 및 서구청, 정서진 중앙시장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청라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남청라C, 북청라C), 경인고속도로(남청라C~서인천C~신월C 구간 지하화 예정), 서울7호선(청라 연장), 공항철도, 경명대로, GRT·BRT(청라3동~청라2동~청라1동~가정1동 순환)

○ 서구병

선거구별 인구 편차 최소화,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을 때, 경인아라뱃길 북측으로 검단신도시 조성 및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 출퇴근 시 주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권역 중심으로 서구병 지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을 조정

- 지 리 : 아라뱃길 북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측, 김포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검단사거리·완정사거리·검단신도시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원당대로, 올림픽대로, 서울지하철 5호선(연장예정)

[B안 : 선거구간 인구 최소편차]

〈인천 서구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제안〉

서구갑 선거구	190,130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 선거구	198,157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병 선거구	204,011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 서구갑

심곡천 남측으로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일반화 및 지하도로 개통이 추진되며 봉수대로 동측으로 루원시티가 조성되는 권역으로 서구갑 지역(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을 조정

- 지 리 : 심곡천 남측, 부평구·미추홀구·동구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루원시티·석남역세권·가좌시장 중심으로 확대,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 권역
- 교 통 :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 가좌IC), 봉오대로, 서울지하철 7호선

○ 서구을

경인아라뱃길 남측으로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경서3 도시개발구역 등이 조성되는 권역으로 서구을 지역(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을 조정

- 지 리 : 아라뱃길 남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남측, 심곡천 북측
- 생활문화권 : 청라국제도시·검암역세권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청래C), 수도권제2순환고속(남청래IC, 북청래C), 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경명대로

○ 서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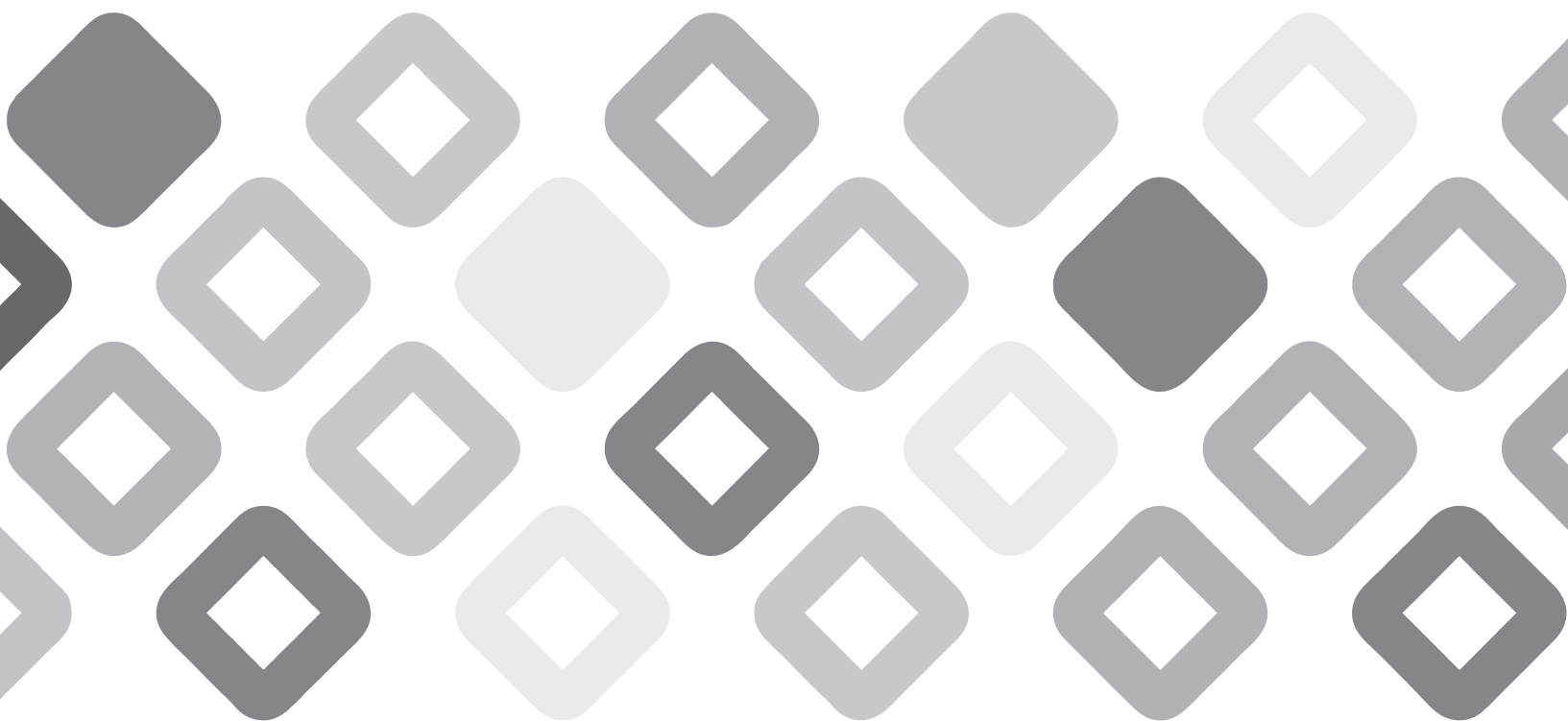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선거구별 인구 편차 최소화,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을 때, 경인아라뱃길 북측으로 검단신도시 조성 및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 출퇴근 시 주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권역 중심으로 서구병 지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을 조정

- 지 리 : 아라뱃길 북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측, 김포 인접 지역
- 생활문화권 : 검단사거리·완정사거리·검단신도시 중심으로 확대
- 교 통 : 원당대로, 올림픽대로, 서울지하철 5호선(연장예정)



차 성 수

인천YMCA 사무처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차성수 | 인천YMCA 사무처장

1 불부합 문제

○ 상하한인구수 초과 선거구

- 상한인구수 : 271,042명

인천	서구을	323,235 (+52,193)	○ (인구수) 서구 592,298명(갑·을)
----	-----	----------------------	--------------------------

- 하한인구수 : 135,521명

인천	연수구갑	133,276 (△2,245)	○ (인구수) 연수구 385,573명(갑·을)
----	------	---------------------	---------------------------

인천서구을은 상한인구를 넘어서 있어서 일부동의 조정이 필요하고, 연수구갑은 하한인구에 모자라 다른 동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연수구갑의 경우 연수구을에서 한 동을 이동하는 것으로 하한 부족을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연수구갑에 이미 있는 옥련동이나 동춘동을 이동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의 경우 갑을을 합한 인구수가 상한인구수의 2배(542,084)가 넘으므로 단순히 2개 선거구로 분할할 수 없고, 하한인구수의 3배(406,563)가 넘으므로 3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서구의 경우 현재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할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검단구로 예상되는 지역(현재 서구을선거구)에서 청라3동을 제외하고 구성하고, 청라지역을 별도로 선거구로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청라1동, 2동, 3동 만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기에 인구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접한 가정동을 붙이는 것이 적합하다.

2 기타 의견

○ 행정개편안 문제



인천시, 남은 행정구역 개편... "미래형 자치구 '2군·9구' 추진 속도 낸다"

행정개편 소통협의체 출범, 시민의견 적극 수렴나선 '인천시'

인천시가 행정개편 추진을 두고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소통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2개구로 나누고, 기존 중구 영종도 일대를 영종구로 나누며,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의 행정개편은 지난해 8월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선언 이후 대시민 홍보와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절차 추진 등 비교적 빠른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5월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정식 건의하고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시가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아닌 행안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가칭 '인천시 검단구, 제물포구 등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준비 중인데, 정부 동의를 얻은 뒤 국회에서 논의될 때 공감대 형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법률안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구 설치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인천광역시가 행정개편안으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개편되는 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개편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하겠다.

중구(영종 제외)와 동구를 통합한 선거구가 필요하며, 영종도 지역을 별도 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강화군과 옹진군만으로는 독립 선거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인데, 영종도와 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서구의 경우도 검단지역과 기존 서구 지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구획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앞서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분할 방안에서 적시 한대로 서구 인구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분할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이미 자연적, 문화적으로 분할 되어 있는 기존의 자연스러운 지역 구도에 따라 선거구도 분할되어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 위쪽은 자연적 구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할되어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청라 신도시와 루원 신도시는 함께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 인구 감소와 유입의 문제

인천광역시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가 피크를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화 방향이 워낙 강력해서 인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인천지역이 광대하고 지역별 특성이 많이 다름에 따라 인구 감소세는 지역별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의 인구가 감소세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신도심에서의 외부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도심의 인구 감소와 신도심의 인구 증대의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구도심의 선거구가 감소하고, 신도심의 선거구가 증대할 것도 자명한 것으로 본다. 인구수만으로는 당연한 방향이지만 인천 전체의 지역 통합성과 문화적 일체화의 문제,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치적 수용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획일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유사한 지역끼리 한 선거구로 묶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러한 지역 분할의 기표화됨에 따르는 지역적 분할적 의식과 지역적 차별적 의식이 자라나는 구조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상한, 하한의 범위 문제

현재 상한 271,042명과 하한 135,521명은 2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준이다. 이러한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 효과를 위해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인구비례에 맞추어 선거구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딱 맞아 떨어지는 답을 주지는 못 한다. 다만 그럴 때 선거구 분할은 정치적 거래가 아닌 합리적 이유에 맞추어야 한다.

○ 인구수 기준 일정의 문제

최근의 인구통계에 근거하여 인구수 기준을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으로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일의 며칠 전에 인구수 기준을 잡는지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선거제도 관련

현재 소선거구제도에 맞춘 현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선거구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중대 선거구 제도로 변화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체가 한 선거구가 될 수도 있고, 2~3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재 선거구 획정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표심의 왜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적실한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